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의 원 : 성보빈 · 감규상 · 곽은정 · 권순재 · 김수민 ·
김우진 · 김원일 · 김인애 · 남호준 · 문순규 ·
박연정 · 심임숙 · 오춘근 · 이무식 · 이우완 ·
이정희 · 장병운 · 전태완 · 정은미 · 차중현 ·
홍용채 · 황점복 의원(22명)

찬 성 의 원 : 배명갑 · 진형익 · 하경석 의원(3명)

1. 제안 이유

- 창원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 방산 등 국가 핵심 산업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산업 고도화에 따른 기술보호, 지식재산, 안전규제 대응 등의 법률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음
-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 내 법학전문대학원 부재로 시민과 기업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법조 및 행정 중심도시이자 산업 중심지로 전문 법률 수요가 급증함
- 이에 따라 향후 법률 수요와 졸업생의 사회 진출 전망을 고려할 때 창원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최적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도권 편중을 시정하고 법률서비스 접근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착수를 촉구함
- 정부는 관계부처와 창원시 · 국립창원대학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상남도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창원에

설치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역 간 법률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문제는 단순히 지역 간 유치 경쟁의 논리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시정하고,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대한 공공정책 과제다.

그럼에도 현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과반이 넘는 14개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11개의 법학전문대학원 중 창원시를 비롯한 경상남도에 허락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없다. 경상남도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부재한 지역이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지역 내 전문 법률인력 양성 기반이 전무한 탓에 관련 인력 수급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2026년 기준 경남의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1.6명으로 전국 평균 7.6명의 21.1%에 불과하다.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률 복지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법검찰청 본청, 경남도청의 소재지로 경남의 법조 및 행정 중심도시인데다 기계·방산 등 국가 핵

심 제조업이 집적된 산업 중심지로 산업 고도화에 따라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전문 법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의 법률 수요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최적지로 판단된다.

특히, 국립창원대학교는 균형 있는 법률 인프라의 조성과 지역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0만 창원 시민과 지역 법조계 및 산업계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관계부처와 창원시·국립창원대학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행 가능한 국립창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도권 편중을 시정하고 법률서비스 접근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하라.

2026년 7월 27일

창 원 시 의 회